여야, 누리과정 예산 '부담 책임' 공방

박혜자 의원 "전국단위 보육사업 정부가 책임져야"

'아이폰 6' 대란 관련 단통법 실효성 한목소리 질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누리 과정의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이폰 6 보조금 취소 사태와 관련해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통사 3곳이 담합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공방이 재연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 책임'을 촉구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원 약속을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던 예산은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을 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14년에도, 2015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더니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특히,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면서 신분 고착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 사회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호소해 숙연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이폰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반면,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 보육의 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힘을 합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진행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 문 비대위원장, 우 원내대표,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서울시교육감), 백재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완구 "방산비리 TF구성…일벌백계"

새누리, 국회차원 적극대응

새누리당이 방위 산업 비리와 관련,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자원개발·방산비리에 대한 국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혈세 수십조원을 눈먼 돈으로 날린 총체적 비리까지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입은 손해 이면에는 리베이트로 이득 본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권력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논의 다시 불붙나

여야 의원모임, 내주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 제출

여야 국회의원 153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이 다음주께 의원 40여명의 이름으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꺼질 듯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촉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은 5일 "오는 7일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면 다음주 40여 명이 서명한 특위 구성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구성요구안은 국회에 여야 의원 10명씩 총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개헌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서는 개헌모임 소속 전체 의원 154명의 이름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다"며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구체화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중 기간 '개헌 봇물론'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정기국회 내 개헌 논의는 없다"고 물러서면서 주춤했던 국회 내 개헌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야권의 동조가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표적 개헌론자인 만큼 야당에서도 개헌모임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헌이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헌특위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석현 "계파수장, 전대 불출마를"

"공천권 행사 계파갈등 심각…비대위원들도 양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5일 "전당대회에 비대위원을 비롯한 계파수장들이 당 대표에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견을 전제로 "비대위원들이 당을 위해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비대위원들 중에서 출마자가 있으면 비대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당선자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미덕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 가운데 계파수장의 불출마를 제안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지난 3일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주최한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계파수장들을 향해 전대 불출마 협약을 맺으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문재인 비대위원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비대위원은 "공천제도를 아주 투명하게 제도화하면 공천 때문에 세력을 모아 계파를 만들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천제도 개혁이 계파 문제의 해법이라는 문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교과서적인 말씀이다. 전대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 반대"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을 반대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는 안행부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징계권을 부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 설치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